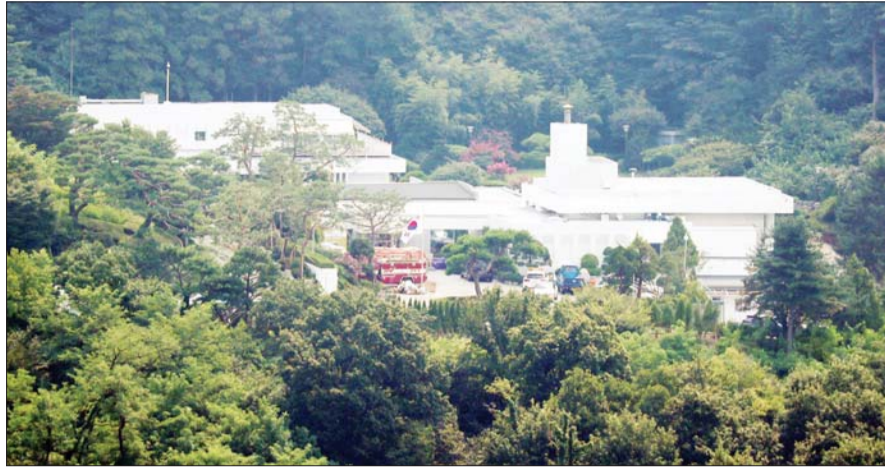


# 尹 관저 이슈에 BTS 병역특례까지... 국방장관 자질론 점화

尹 관저로 쓰일 외교부 공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주민 의견수렴 여부 놓고 의혹 부서관 초입 280만원 실언도



지난달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소방차 등 각종 차량이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외교부 한남동 공관의 울타리에 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하고 급작스런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 ◆한남동 공관 한정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에 한남동 일대 13만6603.8㎡가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사목적 위해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변경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

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지(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지정한다. 해당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대통령령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방호를 위해 복악산 일대에 대공기지 등 군사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뮌인 선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한남동 공관도 최외곽지라는 제한설정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군당국이 한남동 공관을 기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인가?

한남동 공관의 경비와 경호는 서울경찰청 101·1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았던 청와대와 달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게 될 한남동 공관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업무 담당자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시위자들을 해산 또는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영관 장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서오시라며 쉬이 내준 국방부 청사의 전후를 잊은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삼엄한 경호는 당연한 군의 임무이지만 시민과 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생각한다면 한남동 공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바짝 낮춘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일본지위대(준군사조직)의 육일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일본 육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일본이 관함식에서) 육일기를 게양했다"고 말했다. 이는 육일기가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는 일본의 토속신앙적 상징에서 사용돼 왔다는 일본측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방위원회회의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정책대담 유튜브에서 부서관 초입이 280만원이라고 실언했던 이 장관이었기에, 이번 발언도 군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조선업·농업 등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확대 '주52시간' 확대에 '특별연장근로' 급증

정부, 고용허가제 인력 1만명 확대 제조업 6800명, 농축업 1230명 등 "신속 처리... 내년 1분기까지 입국"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달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 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지난달 인가 건수 전년비 77%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도 영향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올해 들어 77% 가장 크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가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남용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54.0%)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50~299인 44.7%, 5~49인 37.0%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300인 이상은 18.2%

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발표 후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을 제 공한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찾아 주52시간제 개편을 강조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 LH 등 공기업 14곳, 부채 34조 줄인다

기재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낮추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총 34조 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자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해 34%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65%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LH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

도공사 등이다. 현재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2000억원)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